

# 스마트 농생명산업 집중 육성 총력

### 전북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2020년 연차평가 '매우 우수' ... 국비 1억원 확보

전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2020년 연차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도는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 국비 1억원을 인센티브로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을 기반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한 혁신 생태계 구축, 지역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전국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산업과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을 위한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북도와 완주군이 손을 잡고, 전북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국비 84억 등 총 14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산업고도화 거점구축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개방형 혁신 공간(OpenLAB) 구축·운영'과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 상용화 촉진을 위한 '중장기 선도 연구개발(R&D) 과제'로 나뉘어 추진된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수산대학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3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원 기업 33개 사가 22건의 농촌진흥청 특허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기술이전을 수행했

다.

이들 기업은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시제품 제작 및 현장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검인증 등을 통해 68억원의 매출과 25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연구개발을 통한 중장기 발전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식품 생육환경 재배용 설비구축 완료 및 생육조건테스트' 및 '축산차량 무인 방역 통합시스템 개발과 실증단지 구축 등 중장기 선도 연구개발(R&D) 과제' 추진을 통해 특허출원 9건, 매출 34억원, 고용 18명을 창출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원스톱 기술 사업화에 대한 전 주기에 걸친 기업지원과 스마트 농생명 산업을 위한 핵심요소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 테스트를 통한 상용화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병승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스마트 농생명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4차 산업과 농생명 산업을 융복합한 성공모델을 개발해 도내 관련 기업의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의 이번 평가는 개방형 혁신공간(OpenLAB)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10개 지역 컨소시엄 대상으로 2020년 수행성과를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전북도는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아 2021년 사업비가 국비 1억원이 증액된 2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새만금 유역 가축분뇨 관련 시설 시·군 합동점검

전북도가 18일부터 새만금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새만금 유역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 시·군과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도는 18일부터 31일까지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불법 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위반지역, 민원 발생 지역 등 30여 개소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4개소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분철 퇴비·액비 살포 시기를 맞이해 퇴비·액비화 기준(부속도, 함수율 등) 준수 여부, 액비의 살포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퇴비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살포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와 시·군은 합동점검, 수시점검, 시·군 자체 점검 등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2,901개소를 점검해 관리기준 위반, 변경신고 미이행, 공공수역 유출 등 340건 적발을 적발해 고발 133건, 과태료 162건(9,077만원), 조치명령 45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윤동욱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도는 시·군과 협력해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에서도 자율점검 및 시설 정비 등으로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봄은 올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17일 LH 공사 전북지역본부 일대에 꽃이 피어오르고 있다.

### 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 위한 정수장 위생관리 점검

전북도가 도내 정수장에 대한 선제적 위생관리 실태조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정수장 18개소에 대해 오는 4월 12일까지 정수장 및 주변 위생관리 상태, 정수처리 전 과정의 운영 실태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정수장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역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전북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지원센터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정수장 위생상의 조치기준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조사 결과 시·군별 운영관리가 미흡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수와 침전수 유출수, 여과수, 역세척수, 정수 등 정수처리 계통상의 유출 및 외부 이물질 유입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고, 현미경으로 유출 및 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한국수자원공사 기술지원 전문가와 시·군의 수도운영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전문교육과 모의훈련 등 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상수도 시설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전문 컨설팅을 실시, 수질 개선대책과 통합운영관리 등에 대한 진단으로 수도 운영관리를 전문화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인기'

#### 지원 가능 임산부 4558명 중 사업 개시 한 달 만에 2083명 신청

지난 2월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임산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지원 가능한 임산부는 4,558명인데 사업 개시 한 달 만에 2,083명이 신청해 상반기 중 신청이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올해 신청률이 높은 이유를 코로나19로 장보기가 부담스러운 시기에 스마트폰 등으로 간편하게 주문이 가능한 이점과 맘카페 등 SNS를 통해 꾸러미를 공급받은 임산부들의 긍정적인 구입 후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임산부는 농산물 구매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최초 주문 후 1년 동안 48만원어치의 친환경농산물을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군산시의 A 산모는 "아이를 낳은 후 건강과 환경에 관심이 커졌는

데 이렇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으면서 임산부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글을 남겼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 및 축소돼 판로를 잃은 친환경 농가들은 "어렵게 키운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가 생겨 기쁘고, 임산부들이 드시는 만큼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농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별 배정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농식품부에 예산을 추가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공급업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매월 진행하는 등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발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협의회를 통해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방안, 임산부 편의 증진 등 발전적 논의의 결과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신청하려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직접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 임신 및 출산 확인서를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유호상 기자

### "LH 투기 의심자, 부당 이익 환수"

#### 정부, "대토보상 배제·현금보상만...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도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가 17일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최 차장은 이어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 의심자들에게 신도시 개발 이후 기대되는 추가 차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LH 투기 의심자의 경우 투지 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할 방침이다. 미래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봄으로써 사실 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

상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18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조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전 조사 작업에 착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총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신도시 지역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 LH 직원 20명을 투기 의심자로 확인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주도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